

갈라지는 광주·전남·전북... 호남 동질성 회복 시급하다

호남이 갈라지고 있다.

공간적으로 인접해 역사·문화·정치·경제 등에서 고유한 특징을 공유해온 호남이 광주, 전남, 전북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한 권역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함께 하며 축적된 동질감이 사라지고, 민선자치시대 들어 선거를 염두에 둔 단기 성과 위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지역의 이익만 챙긴 탓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호남에 대한 국가의 불균형시책이 지속되면서 미흡한 정부 사업·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광주·전남·전북 간 견제·경쟁도를 넘어서면서 감정까지 상해 쉽사리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호남의 내분 속에 정부·여당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정부 사업 및 재정을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낙후도가 가장 심한 호남이 성장·발전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

전북, 새만금공항 추진 독자 노선... 민주당 균형발전전략에서도 '분리'

광주·전남, 민선 7기 들어 마찰 심화... 공항 갈등에 감정의 골 깊어져

성장·발전 기회 상실 우려... 권역 내 협력사업 발굴해 탄력적 대응해야

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이 권역 내 연계·협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갖고, 갈등·마찰 사안은 당분간 논의를 중단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력, 협상력, 포용력 등을 키워 향후 상호 존중·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해서는 한 권역의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과 일부 국

책사업이 중첩되면서 갈등 양상을 빚었고, 지난 2019년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된 뒤부터는 사실상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 위주의 호남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에서 전북과 광주·전남을 분리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을 강원·제주와 같은 강소권 메가시티로 하고, 광주·전남은 대구·경북과 함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부·울·경 등과 같이 인구·경제·미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광주·전남과 전북이 분리될 경우 전체적인 정부 지원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은 민선 4기 빛가람혁신도시 공동 조성에 합의한 뒤 민선 6기에서 상생발전을 다짐하기도 했지만 민선 7기 들어 갈등·마찰만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 유치전을 치르면서 상호 신뢰에 금이 갔고, 민간공항(국내선)과 공공공항 이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 민간공항을 옮기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면서 전남의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약속 성실 이행'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상호 불신만 커지고 있다.

호남의 내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사업'에도 고스란

히 드러났다. 충청권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비 2조2400억원)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6903억원)을, 그리고 대전·충남·세종·충북, 부·울·경 역시 '동남권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7조7195억원), '동남권 그린 수소항만 조성' (1540억원)을 부·울·경이 함께 하겠다고 한 반면 호남은 '웰에이징 휴먼 헬스케어 밸리조성사업' (8000억원)만 광주·전남·전북이 참여했다. 연계·협력 사업 발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 지역 대학 교수는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버텼었던 호남권이 이제 더 이상 협력하는 것보다 자기 지역과 유권자만 보는 '소지역주의'로 가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인구가 적고 경제기반이 열악한 호남 내 지자체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하루 22명 코로나 무더기 확진

교회 5곳서 나흘간 21명

교도소·대학병원 등 추가 감염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광주에서 종교시설과 대학병원, 교도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광주 5개 교회와 관련해 모두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발 대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825명을 기록했으며, 앞서 지난 13일 하루에만 밤 사이 교회발 확진자 6명이 추가되는 등 총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일 22명 발생은 지난 8월 26일 교회발 확진으로 광주에서 하루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례다. 교회의 경우 성가대 모임을 하거나 함께 식사하고, 또 목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 등 예배를 진행하면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11일 이후 광주 5개 교회와 관련해 모두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추가 확진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 남구의 모 교회는 서울 한 목사를 초청한 강연에서 이 목사와 교인 등 7명이 감염됐으며, 또 다른 2개 교회에선 6명씩 확진됐다. 나머지 2개 교회

에선 각각 1명씩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39명의 검사

가 진행중이어서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교회마다 30여 명에서 170여 명까지 접촉자들을 파악해 검사를 벌였으며, 예배나 강의에 참석한 교인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한 반면 목사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대해 2주간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인 간 접촉 등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또 소재지 자치구는 방역 수칙 준수 실태를 파악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예배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규 예배 외 모든 종교 모임, 활동, 식사 등이 금지된 2단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들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정규예배 외에도 성탄 준비 등을 위한 다양한 소모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임 금지 등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감염원도 감염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 광주 교도소에선 수용자 전수검사에서 6명의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남대병원 간호사 2명과 입원환자 1명도 신규 확진됐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시기로, 마스크 쓰기과 손씻기, 외출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이날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 480명을 유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4일 오전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정부차원 'SRF 새 협의체 구성' 촉구

전남도가 나주 SRF(고형연료)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종료되면서 4개 기관이 제안한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SRF 발전소를 가동하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허가권을 행사해 서라도 가동을 저지하려는 나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SRF 발전소 가동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국난방공사의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어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5개 주체가 2년의 노력에도 끝내 결렬된 것은 난방공사의 과도한 손실보전 범위가 원인이 됐다"며 "난방공사는 주민들

과 소통하면서 대체사업 발굴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시민들이 SRF 발전소 가동 저지를 위한 릴레이 민원 신청과 차량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어려울 경우 난방공사 측은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배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전남도는 각 주체들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협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 산업부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황금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해운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망월대로 516(수완동)
*호신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아원대로 603(남일 20(수완동))
*주관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로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 A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9단,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6),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9단,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6),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로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 저물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